

현실주의 평화운동의 실험: 한국의 이라크 파병반대운동 재평가*

서보혁(서울대)

이 글은 평화운동이 이상주의에 근거한 비현실적 행동이라는 통념을 사례연구를 통해 반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장에서는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분석틀을 만들 것이다. 3-4장에서는 현실주의 시각에서 파병 지지 및 반대 입장을 균형적으로 비교 검토할 것이다. 5장에서는 파병을 둘러싼 논쟁 구도가 현실주의 대 현실주의였다고 결론짓고 이상의 분석이 주는 함의를 언급할 것이다. 분석 결과 평화운동이 이상주의라는 통념은 반증될 수 있고, 평화운동세력의 파병 반대운동은 현실주의적 입장에서도 주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평화운동, 국가이익, 현실주의, 이상주의, 이라크 전쟁, 파병반대운동.

1. 문제제기

평화운동은 국경을 넘어 영구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 평화라는 이상을 실현하려는 사회운동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평화교육, 비폭력 저항, 외교, 보이콧, 청원, 도덕적 설득, 반전 정치인 지지, 무기 제조 및 수출 금지 등 각종 비폭력적 방법을 동원한다. 평화운동은 종교적, 철학적, 사회적 제 측면에 근거를 두고 있고, 대규모 전쟁이 일어난 유럽에서 태동하여 세계적으로 발달해왔다(Corrigh 2008, Chatfield and Keidman 1992,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361-A00017).

Peace III 1991, Moorehead 1987, Murthy 1987). 평화운동은 힘에 의한 평화를 옹호하는 주류 국제정치학이나 현실 정치권으로부터 이상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개인과 집단이 처한 위치와 조건에 따라 백가지 이상의 다양한 실천양식을 제시하며 전개되어왔다(Ashford and Dauncey 2006). 이 글은 평화운동이 이상주의에 근거한 비현실적 주장이나 행동이라는 통념을 사례연구를 통해 반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한국에서 평화운동은 평화의 제일 위협세력으로서 간주되는 북한과의 대화·협력과 연결되므로 분단 현실을 망각하는 이상주의 혹은 낭만주의로 치부되기 쉽다. 그런 점에서 평화운동이 이상주의적이라는 주장을 반증하는데 한국을 사례로 삼는 것은 적절하다고 하겠다. 한국에서 평화운동이 본격화 되고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2003년 미국 주도의 이라크 전쟁과 그와 관련한 미국의 파병 요청이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공격 명분이 입증되지 않은 가운데 전개되었고 거기에 부시(G. W. Bush) 행정부의 일방주의 외교안보정책까지 겹쳐 미국은 전 세계적인 반전여론에 직면하였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에서도 이라크전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파병을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증대하였고 조직적인 파병반대운동이 전개되기에 이른다.

한국에서는 파병 찬반을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되었고, 그런 가운데 노무현 정부는 많은 고심 끝에 파병을 결정하기에 이른다. 이때 파병반대세력은 전통적인 시민사회운동만이 아니라 중도적 시민단체와 종교권, 국회, 그리고 소수지만 정부내 인사들까지 폭넓게 형성되었다. 그래서 미국의 파병 요청-정부의 파병 결정-국회 통과-파병 실행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첫 파병의 경우 5개월, 추가파병의 경우 1년이 걸렸다(우경림 2010, 24, 51).

이 연구는 한국 정부의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찬반 논쟁을 파병 지지=현실주의=국익 증진 대 파병 반대=이상주의=보편가치 증진이라는 통념

적인 구도에서 탈피해 두 현실주의의 대립으로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런 논지 전개에 대해 2장에서는 이라크 파병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분석틀을 만들 것이다. 3-4장에서는 현실주의 시각에서 파병 지지 및 반대 입장을 균형적으로 비교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5장에서는 파병을 둘러싼 논쟁 구도가 현실주의 대 현실주의였다고 결론짓고 이상의 분석이 주는 함의를 언급할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국회 회의록과 평화운동단체의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고 관련 정책결정자들의 증언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1차파병 및 추가파병 결정과정에 한정해 논의하고 있다.

2.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틀

1) 선행연구 검토

국내에서 이라크 파병 관련 연구는 크게 파병 결정과정 연구, 비교사례 연구, 평화운동 연구 등 세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 파병 결정과정 연구는 한국정부의 파병 결정이 이루어진 경과와 대내외 요인에 초점을 둔 연구를 말한다. 우경립(2010)은 노무현 정부의 1차 및 추가 파병 결정 과정을 앨리슨(G. Allison)의 정책결정 모델을 적용해 살펴보고 있다. 두 차례의 파병결정은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에서 대통령과 미국 같은 전통적 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면서도 국회, 시민단체, 국제 여론 등 새로운 변수의 영향이 혼재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병주(2005)도 파병반대운동이 노무현 정부의 파병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파병 규모 및 시기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에 비해 박원희(2006)는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정책 결정과정을 국가 자율성 개념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국가자율성이 대

내적으로는 감소하고 대외적으로는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두 번째 연구 유형은 이라크 파병을 베트남 파병과 비교하거나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는 연구이다. 대표적으로 김관옥(2005, 357-385)은 한국의 베트남 파병과 이라크 파병을 양면게임(Two-level game) 이론을 적용하여 두 사례 간 차이의 원인을 규명한다. 연구결과 베트남 파병결과와 달리, 이라크 파병은 파병반대세력의 등장과 국내정치제도의 다원주의화, 그리고 대미 안보의존도의 완화 등이 한국의 원색을 상대적으로 축소시켜 정책결정과정이 상당히 갈등적이었고, 그 내용도 미국의 요구와 한국의 선호가 상호 절충된 것으로 파악한다. 장올래(2008)는 탈냉전시기 한국과 일본의 해외파병을 네 가지 요인을 대입하여 분석 평가하고 있다. 분석 결과 한국의 이라크 파병 결정요인은 동맹관계가 직접적 요인으로, 국내 정치과정, 군사력, 위협 요인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의 파병 결정요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동맹관계에서도 한국의 경우는 동맹관계 개선을 목표로, 일본은 동맹구조 강화를 목표로 한 점도 차이점이다. 국내정치에서 한국은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한미동맹 강화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일본은 보수화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파병 관련 비교연구는 계운봉(2012), 김장흠(2010) 등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주로 동맹관계, 국내정치제도, 파병 지역에서의 국가이익의 크기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본 연구와 가장 관련이 깊은 반전평화운동에 관한 선행연구이다. 이 분야의 연구에는 파병반대운동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운동의 당위성에 대한 옹호,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해볼 수 있다. 파병반대운동에 대한 분석으로 김현미(2007)는 정치과정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는 이라크 파병반대운동을 “한국 최초의 대중적 반전운동”으로 평가하면서 그 운동에 영향을 끼친 각 요인들 사이의 관계와 상호작용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미국, 북한이 군사적·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제 정

치상함과 ‘참여정부’의 출범과 같은 국내 정치상황, 반공주의·국가주의 이데올로기가 강한 한국사회의 조건을 다루고 있다. 결과적으로 파병반대운동은 파병을 지지하지는 못했지만 운동의 명분과 정당성을 정부와 공중에 인정받고 참여자들의 의식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여진(2005)도 이라크 추가파병 과정에서 ‘이라크파병반대비 상국민행동’이 이끈 운동의 영향력을 조직, 수단, 환경 등 세 측면에서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한국의 파병 결정은 미국의 요구를 절대적으로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냉전시대의 타성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주요 요인이 정부 내 관련 부서들 간의 정책 갈등이었다는 점에서 이라크파병반대운동의 독자적인 영향력은 행사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이라크 파병반대운동을 옹호하는 규범적 논의는 강정구(2004, 281-309)에 의해 선명하게 제시된 바 있는데, 「이라크 전쟁과 파병: 미국의 야만성과 한국의 자발적 노예주의」라는 글의 제목에서 주장이 잘 드러나 있다. 황인성(2003, 108-122)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계기로 일어난 반전평화운동을 균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발전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는 분단국가로서 냉전이데올로기에 짓눌려 있던 한국사회에서 ‘평화’와 ‘반전’이란 용어가 생경하게 들릴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평화운동세력이 해외의 전쟁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세계평화운동과 연대해 직접 현지활동까지 하며 전쟁반대, 파병반대운동을 벌인 것은 이전과는 다른 변화라고 평가하고 있다. 김엘리(2003, 17-30)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이라크 파병문제를 다루며 파병 찬반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는 이라크 전쟁을 힘의 우위와 이원화된 사고구조를 바탕으로 한 군사안보에 의존하는 폭력으로 규정하고, 파병반대운동을 국가의 군사동원체제를 거부하고 세계평화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이라크 파병을 헌법에 비추어 판단하는 규범적 논의도

일어났다. 이경주(2004, 111-127)는 이라크 파병이 대한민국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평화주의를 위반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파병 거부가 과연 국가의 안전보장에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지, 또 파병이 국가안보에 기여할지 의문이라는 주장도 덧붙이고 있다.

이상과 같은 파병 반대론은 침략전쟁 반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Galtung 1994) 등을 명분으로 하고, 평화운동, 페미니즘(feminism), 헌법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전평화운동은 이상주의로 특징 지워지거나 그렇게 비판받아 왔다. 즉 반전평화운동의 대의와 주장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현실성이 약하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약점을 갖는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반전평화운동이 이상주의적이라는 통념을 한국의 이라크 파병반대운동을 사례로 검증해볼 것이다.

2) 분석틀

본 연구의 분석틀을 수립하는데 주제어는 ‘국가이익’과 ‘평화’이다. 왜냐하면 국가이익과 평화는 전쟁, 파병, 외교안보정책과 같은 용어의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시각에 따라 파병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국가이익이란 개념은 많은 사람들이 그 정의를 시도해 왔지만(Carr 1956; Osgood 1953; Morgenthau 1951), 힘과 도덕, 현실과 당위가 혼합된 것으로서 이 중 어느 한쪽에만 의존하는 국가이익은 불완전하다(구영록 1995, 23). 도덕과 당위를 중시한 이상주의적 국익 개념은 힘과 현실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에 의해 비판 받아왔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무정부 상태인 국제정치 현실에서 생존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이익은 힘에 의해 정의되지만, 그렇게만 한다면 자기파멸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핵무기 경쟁이 그런 위협을 잘 보여주었다.

국가이익은 국민들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추구하는 욕망이나 자기

애가 국가공동체로 전이된 것으로 정의할 수도 있지만 명확한 정의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국가이익을 군사적 측면에서 생존, 경제적 측면에서 번영, 외교적 측면에서 위신으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이 세 요소로 국가이익을 정의해도 다양한 요소들 사이에 우선순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민주화, 과학기술 발전, 국제질서 변화 등에 의해 국가이익 개념도 변할 수밖에 없다(구영록 1995, 24-36). 또 같은 시대라 하더라도 국가구성원들에 따라 국가이익에 대한 정의가 달리 나타날 수도 있다. 요컨대, 국가이익에 대한 정의도 정태적 시각과 동태적 시각에 의해 다를 수 있다. 그 아래에 국가이익은 유형의 이익과 무형의 이익, 단기적 이익과 중장기적 이익 등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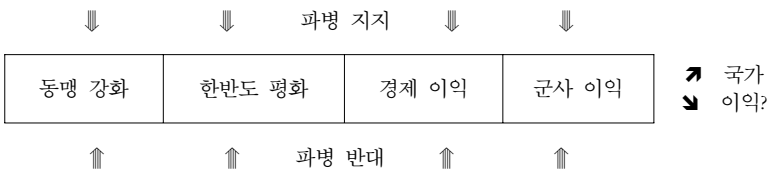
한편, 평화가 인류 공통의 염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입장 차이가 크다. 그 차이는 단지 방법상의 차이가 아니라 평화관, 세계관의 문제이기도 하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는 현실주의적 평화관,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지켜라(Si vis pacem, para pactum)는 이상주의적 평화관으로 대별할 수 있다. 대북정책을 포함한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을 둘러싼 국내 여론의 균열도 기본적으로 이런 평화관의 차이에서 연유한다. 현실주의적 시각은 국가이익을 생존을 우선에 놓고 정의하고 그 달성을 위해 힘에 의존한다. 이때 힘은 군사력으로서 국력이 부족할 경우 강대국에 의존할 수 있는데, 이때 두 국가 간에 불균등한 후원-수혜관계가 성립된다. 이라크 파병 지지론은 현실주의 시각에서 한국의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미국이 관여하는 이라크 전쟁에 파병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것이 대등한 한미관계 정립에도 유익하다는 입장이다(김성한 2004; 구우회 2012).

한편 이상주의적 평화관에서 볼 때 이라크 파병은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것으로서 이라크 민중의 생명을 앗아가고 중동평화를 해치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반평화적 처사로 보인다. 이라크전쟁은 잘못된 정보, 잘

못된 판단에서 시작됐고 ‘반테러전’을 명분으로 한 부시 미 행정부의 일방주의 외교안보정책으로 중동 평화와 이라크인들의 생존은 위협에 처했다고 지적받았다(노엄 촘스키·하워드 진 외 2002). 특히 한국의 이라크 파병은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것이므로 노무현 정부의 제일 파병 명분인 한반도 평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되었다(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정책사업단 2005). 이렇게 파병에 반대한 여론의 상당 부분이 이상주의적 평화관에 기초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파병반대세력의 입장이 도덕과 명분에만 의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주로 현실주의론에 의존한 파병지지세력도 세계평화, 동맹국에 대한 의리, 반테러 등 명분론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마찬가지로 파병반대세력도 현실주의 논리를 제시하며 파병지지세력과 대립한 측면이 적지 않다. 이 연구는 파병 지지 대 반대를 현실주의 대 현실주의의 구도로 파악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라크 파병문제를 둘러싼 우리사회 내 논란을 재조명함은 물론 향후 파병 논의가 보다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발판을 만들어보고자 한다. 파병지지세력은 파병으로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 평화, 경제적 이익, 군사적 이익 등 네 가지를 거론했는데, 파병반대세력은 그런 기대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상호 대립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그림1>과 같이 분석틀을 만들었다.

〈그림1〉 한국의 이라크파병 논쟁구도



3. 파병 결정과 기대효과

1) 파병 결정 경과

1990~91년 걸프전 이후 미국은 대이라크 제재를 가해왔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레이건 정부때부터 극우세력(일명 네오콘)에 의해 추진돼왔는데 그를 위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제작 및 후세인정권과 알카에다의 연계설을 제기해왔다(Johnson 204, 126). 2001년 부시 정부 등장과 9.11사태가 배경이 되어 2002년 11월 8일 유엔 안보리는 미국 주도로 대이라크 결의 1441호를 채택하고,¹⁾ 부시정권은 같은 달 20일 전 세계 주요 50여 우방 및 동맹국들에게 이라크전쟁에 대한 지원 의사를 문의해왔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미국에 대한 지원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정권을 마감했다.

2003년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이라크 공격을 앞두고 한국정부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해왔다. 미국의 두 번째 요청 내용은 1차 요청때에 비해 늘어났다. 특히 전투병 지원을 요청했다. 3월 13일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지지하고 이라크전쟁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3월 18일 미국이 이라크에 최후통첩을 보내자 한국은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이라크 사태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정부의 대책을 논의했는데 그 자리에서 전투 병력을 제외하고 대대급 규모의 공병부대 파견, 아프가니스탄 전개병력 전환, 인도적 지원 및 전후복구 지원 등의 파병 계획을 결정했다. 3월 20일 미국이 이라크 공격을 단행한 날 노무현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500여명 규모의 공병단과 150명 구

¹⁾ 그러나 안보리 결의 1441호에는 이라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군사공격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모의 의무부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시민사회와 여론, 그리고 국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일어났다. 당시 국내여론은 미국, 영국의 이라크 공격에는 압도적으로 반대했지만, 한국군의 비전투병 파병에는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대립하였다(김현미 2007, 55).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파병 동의안 결의가 지연된 것도 그런 상황을 잘 보여주었다. 결국 4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국정연설을 한 후 표결 처리해 파병동의안이 찬성 179표, 반대 68표, 기권 9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파병동의안의 국회 통과 이후 정부는 4월 30일 서희·제마부대 1진 326명을 이라크로 파견했다(국정홍보처 2008, 270-271; 우경아 2010, 12-15).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린 후²⁾ 미국은 이라크 안정화를 꾀하며 신정부 수립을 도모해나갔다. 그렇지만 이라크 내 종족간 갈등과 미국의 미숙한 점령정책으로 시아파, 수니파, 미군 사이의 '3면전쟁'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이근욱 2011). 그런 상황에서 2003년 9월 4일 롤리스(R. Lawless) 미국무부 부차관보가 방한해 한국에 추가 파병을 요청하였다. 롤리스의 파병 요청 내용에는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대규모 파병이 포함되어 있었다. 10월 4일 이라크 현지 상황을 조사한 정부조사단이 귀국해 대통령 보고를 했고, 같은 달 16일 유엔 안보리 결의 1511호가 채택돼 미국의 이라크 공격 및 점령을 사후 추인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 전개 속에서 10월 18일 정부는 추가 파병 방침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 않았다. 같은 달 20일 방콕의 아태경제정상회의(APEC)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에게 추가파병 방침에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는 이라크에 2차 정부조사단을 파견하는 한편 구체적인 파병 계획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정부 관련 부서들 사이에서 입장 차이가 나타났고(이종석 2014, 198-203),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파병반대 여론이 1차

²⁾ 2003년 3월 20일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서 5월 1일 부시 대통령의 '임무 완수' 선언까지 43일이 소요되었다.

파병때보다 더욱 높았다. 2003년 하반기 들어 정부기관과 언론사의 여론 조사에서 추가파병 반대여론이 찬성여론보다 높았다(김현미 2007, 84). 정부의 최종 파병 결정이 늦어진 이유였다.

결국 12월 17일 정부는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재건 지원을 주임무로 하는 3천명 규모의 부대를 파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 결정은 여러 고려사항들을 반영하고 이수혁 차관보의 묘안을 살린 것이었다(김종대 2010, 112). 그러나 거센 파병반대 여론과 국회의원 선거(2004.4.15)로 인해 추가파병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2004년 2월 13일 논란 속에 추가파병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찬성 155표, 반대 50표, 기권 7표). 추가파병안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와 김선일씨 피살을 계기로 추가파병에 대한 반대여론은 식지 않았다. 파병 부대 창설(2.23 자이툰부대), 2차 정부조사단 활동, 주둔지 변경 등을 거쳐 추가파병 부대의 선발대 출국은 9월 3일에 가서야 이루어졌다(국정홍보처 2008, 271-277; 정여진 2005, 25-66).

2) 파병의 기대효과

정부와 국회가 국내외 반전 여론에도 불구하고 파병을 결정한 것은 손익계산 결과 파병이 더 유익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국가이익이 자리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개시한 날 “미국의 노력을 지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파병을 결정했다(경향신문 2003/03/21).

첫째, 한미동맹 강화론이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대통령의 대미관과 통일외교안보정책 결정집단 내 자주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로 인해 서울과 워싱턴 내에서 한미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어났다. 부시 정부 들어 한미관계는 해외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제고와 관련한 주한미

군 재배치 문제,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 북핵문제의 해법 등을 둘러싸고 양국이 서로 민감해진 상태였다. 그리고 미 대외정책의 우선순위 변화와 일방주의 외교,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 등으로 한미관계는 전환기적 도전에 직면해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라크 파병은 한미동맹의 도전을 극복하고 미래 양국관계를 설계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다. 구체적으로 9.11 이후 국제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미국은 동맹관계를 평가하는 데 있어 미국이 주도하는 반테러전쟁에의 참여 여부를 가장 큰 기준으로 적용해왔다. 앞으로 동맹은 20세기적 ‘혈맹’(血盟) 개념으로부터 21세기적 ‘신맹’(信盟) 개념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한국의 이라크 파병은 미국과의 신맹을 이룩하기 위한 투자, 즉 ‘용신’(用信)의 과정이라는 것이다(김성한 2004, 8-10, 12). 실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라크 파병 동의·추가파병·연장 동의안은 모두 한미 동맹관계 발전을 제일의 파병 이유로 꼽고 있다.

둘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론이다.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파병은 힘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치 질서에 대한 적응이라는 의미 외에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한반도 평화문제가 가장 큰 고려요소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4월 2일 국회에서 가진 국정연설에서 미국의 대북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을 도와주고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라고 말했다. 즉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굳건한 한미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³⁾ 사실 2003년은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된 시기였다. 2002년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간주하고 핵선제공격 doktrin을 발표하였고 그에 대응해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요원들을 추방

3) 제238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2003년 4월 2일, 2쪽.

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단행한다. 2002년 10월 북한의 우라늄 핵개발 ‘시인’으로 2차 북핵위기가 고조된 상태에서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준비하며 북핵문제를 중국을 위시한 다자회담 틀로 관리하려 하였다. 이에 북한은 처음 반대 입장을 취했지만 후세인 정권 몰락을 목도한 직후 다자회담 참여로 입장을 선회하였다. 그렇지만 극도로 상반된 입장을 가진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립으로 다자회담의 틀을 짜고 그것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서보혁 2004, 341-347).⁴⁾ 북핵문제는 철저하게 대화를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소신은 확고했다. 그러나 그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판단이었다(문재인 2011, 268). 당시 청와대에서 추가파병문제를 실무책임진 이종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은 “어떻게 추가파병을 노잣돈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길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었다고 증명했다(2014, 198). 노무현 정부의 파병 방침의 제일 이유는 이라크 파병을 통한 한반도 평화 확보였다.

노무현 정부의 입장과 거리가 있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파병이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도 있었다. 위 노 대통령의 국정연설 후 국회의원들 간의 파병 토론에서 오세훈 의원(한나라당)은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미국 정책결정자들의 부담감은 같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파병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⁵⁾ 더 나아가 박세환 의원(한나라당)은 “주한미군 없이는 한반도의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희박하다”고 전제하고 북핵문제로 한반

4) 6자회담은 2003년 8월 27-29일 처음 열렸다.

5) 제238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2003년 4월 2일, 20, 21쪽.

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한미군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파병을 지지하였다.⁶⁾ 이렇게 여야 할 것 없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있었다.

셋째,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이다. 파병시 한미동맹 강화로 북핵위기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켜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개선과 해외 신인도 상승이 기대되었다. 그와 반대로 파병 거부시 한미동맹 악화로 투자 이탈, 남북관계 악화, 국내 금융시장 불안 등 기회비용이 증대한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과장된 것으로 판단되기도 했다(국정홍보처 2008, 278). 그럼에도 이라크 파병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라크전 이후 한국기업의 이라크 재건 참여와 중동 및 카스피해 지역에서의 에너지 자원 확보 등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를 강조했다. 당시 박원홍 의원(한나라당)은 베트남전 파병이 한국경제에 이익을 가져다주었다고 상기하며 “우리 민간기업의 전후복구사업 참여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미국에게는 내밀히라도 확실히 보장을 받고 … 참전을 하기 바랍니다.”고 정부에 권고했다.⁷⁾ 박세환 의원(한나라당)은 베트남전이 미치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와 1차 걸프전이 미친 미미한 효과를 대비시켜 이라크 전후복구사업에 필히, 그리고 적시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⁸⁾ 실제 이라크 재건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이 2004년 1월 재건사업 참여국, 일명 코어그룹(Core Group)에 한국을 포함시키고, 그 결과 현대건설이 동년 3월 미국 임시행정처(CPA) 산하의 이라크 재건공사시행위원회(PMO)가 발주한 이라크 재건사업 중 2억2,0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성한 2004, 14). 이는 한국의 이라크 파병에 따른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되었다.

6) 제238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2003년 4월 2일, 16쪽. 그러나 이후 이라크 사태가 심각해지자 미국은 주한미군의 일부를 이라크에 보낸 바 있다.

7) 제243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2003년 9월 17일, 21쪽.

8) 제238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2003년 4월 2일, 16쪽.

넷째, 군사적 이익에 대한 기대이다. 군인 출신 박세환 의원은 실전 경험이 한반도 유사시 위기 대처 능력을 배양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전투 부대까지 보내면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또 작전능력을 배양하고 특히 외국군과의 연합작전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 아주 귀중한 경험”이라며 전투병 파병을 주장했다.⁹⁾ 2003년 3월 이라크 파병 및 2004년 2월 추가 파병을 논의하던 국회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김대훈 수석전문위원도 파병이 국익과 관련된다고 평가하면서 거기에 한국군의 연합작전능력 배양 및 실전 경험 축적을 언급한 바 있다.¹⁰⁾ 실제 자이툰부대의 민사작전은 동맹군의 ‘민사작전 모델’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치안확보, 민심확보, 재건지원 등으로 구성되는 민사작전은 구체적으로 다양한 사회개발 지원, 인도적 지원과 주민친화적 작전으로 이라크인들의 지지를 얻었다는 것이다. 베트남 파병 이후 사단급 부대로는 최초의 최장거리 해외파병 기록과 함께 독자적인 군수지원 능력을 확보하고 파병경험 인력을 축적함으로써 향후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전투원 육성은 물론, 기후, 지형 등 새로운 환경에서의 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구우회 2012, 70-71).

이상 파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네 가지 국가이익을 살펴보았는데, 그 중 정부가 중시하고 파병지지 여론 중 가장 큰 공감대를 얻은 것은 한미 동맹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였다(문재인 2011, 269). 노무현정부는 경제적 이익과 군사적 이익은 부차적으로 보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적 이익 확보 요소를 과신하지 않는 것이 옳다”(국정홍보처 2008, 275)고 강조했고, 군사적 이익은 전투병 파병까지 지지하는 적극 파병론의 기대까지 묶은 과도한 기대였다. 노 대통령의 입장에서 파병은 ‘잘못된 선택’이지만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되었고, 결국 국익을 증진하는데 효율적인

⁹⁾ 제238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2003년 4월 2일, 17쪽.

¹⁰⁾ 제237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2003년 3월 28일, 5-6쪽; 제245호 국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2004년 2월 13일, 44쪽.

파병외교를 전개했다고 평가하였다(노무현 2009, 223). 그러나 현실주의에 입각한 국익론이 파병지지세력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파병반대세력도 규범적 판단에 그치지 않고 현실주의 관점에서 파병지지세력과 대립하였다. 파병반대세력도 지지세력의 네 가지 논거에 대응하였는데 한미관계와 한반도 평화문제에 초점을 두는 양상을 보였다.

4. 파병 반대의 명분과 현실주의

1) 파병 반대의 명분

노무현 정부의 첫 이라크 파병 동의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반대 명분은 서상섭 의원(한나라당)의 발언에 잘 나타나 있다.¹¹⁾ 서 의원은 파병이 명분 없는 전쟁, 부도덕한 전쟁,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물론 그 이후에도 후세인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제조 의혹, 후세인 정권과 알카에다의 연계 의혹은 입증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의혹이 고의적인 정보 조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많은 양심적 정치인과 지식인들의 지적처럼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부시 대통령과 미국 무기산업과 석유자본, 그 정치적 대변자로서 신보수주의세력(Neo-Conservative)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일어났다(Caldicott 2002).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자 군사주의를 외교정책에 적용한 것이었다. 그것은 세계여론의 반발과 미국의 고립을 초래하기 시작하였다(Johnson 2004, 256). 그런 전쟁에 한국이 파병을 한다면 평화주의를 적시한 헌법¹²⁾은 물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11) 제238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2003년 4월 2일, 24-25쪽.

12) 대한민국 헌법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범위¹⁾를 뛰어넘는 것으로서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2003년 9월부터 공론화 되기 시작한 추가 파병동의안에 대해서는 파병 반대 여론이 더 격렬했다. 국회에서는 추가 파병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았는데, 파병반대 이유가 추가되었다. 예를 들어 제238회 국회에서 김영환, 박금자, 정범구 의원(이상 새천년민주당)은 첫 파병 동의안에 대한 반대 명분에 정부가 추가파병 동의안을 졸속으로 상정한 점, 이라크 국민 80%가 반대하고 이라크통치위원회의 요청이나 승인절차가 없었고 이라크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점 등을 추가했다.¹⁴⁾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입장에서도 강력한 명분이 있었고, 그 내용은 파병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2003년 9월 23일 351개 시민단체들로 결성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발족선언문에서 이라크 전쟁이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고 명분을 상실한 일방적 전쟁과 점령이라고 규정하고, 한국이 거기에 전투병을 파견하는 것은 점령군으로서 미군의 부담을 분담하는 것일 뿐 주권국가를 포기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가 낸 첫 정책자료집에는 미국 주도의 이라크 다국적군이 평화유지군이 아니고, 파병은 부시의 재선을 위해 한국군의 생명을 마치는 처사로서 위헌이자 명분 없는 ‘그들만의 파병’이라는 주장이 실려있다(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정책사업단 2003).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명분은 “우리는 힘의 평화보다는 평화의 힘을 믿습니다.”고 한 김원웅 의원(개혁국민정당)의 발언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¹⁵⁾ 이 표현은 파병을 둘러싼 서로 다른 두 개의 현실주의가 대립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라크전 및 파병 반대 입장에서 선 평화

1)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과 제3조는 양국간 군사협력이 태평양지역에 한정되고 그것도 양국의 헌법적 절차에 따른 것임을 밝히고 있다.

14) 제245호 국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2004년 2월 13일, 4, 7-9쪽.

15) 제238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2003년 4월 2일, 29쪽.

운동세력이 명분을 중시하는 이상주의만이 아니라 실리를 중시하는 현실주의 관점에서의 논리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파병지지세력의 현실주의론과 팽팽한 대척점을 형성하였다.

2) 현실주의적 파병반대론

국내 평화운동세력이 보여준 현실주의 관점에서의 파병반대 논리는 위에서 말한 파병지지세력의 네 가지 입장에 맞서고 있다. 그것은 파병지지세력의 현실주의론, 즉 국익을 위한 파병론이 허구임을 폭로하고 파병반대는 보편가치는 물론 국가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알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 내놓은 성명 중 하나인 “이라크 전투병을 보내서는 안 될 12가지 이유”(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정책사업단 2003, 228-231)에는 파병 반대 명분만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도 실익이 없다고 지적하며 여러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가장 강력한 파병 지지론의 근거로 제시된 한미동맹 강화론에 대한 반론이다. 위 성명은 이라크 파병이 장기적인 한미관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파병지지세력이 미국 내 일부 강경파와 미국 국민 전체를 혼동하고 있고, 파병 거부에 따른 일시적 불편은 미국 대선, 미군철수 여론 등 다른 변수들로 상쇄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전 승리 선언 이후 오히려 이라크 상황이 3면전쟁 양상을 띠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미군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거기에 전쟁 명분이 입증되지 않으면서 미국 내에서 전쟁중단, 미군철수 여론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또 미국으로부터 이라크전 협력을 요청받는 나라들 중 터키와 같이 의회가 정부가 제출한 미국의 터키 영토 사용허가요청안을 거부한 나라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 지지를 선언한 45개국 중 그것을 파병이 아닌 정치적 지지 선언으로 그치는 나라가 30여개국,¹⁶⁾ 파병

방침을 가진 국가들 중에서도 이라크 상황 악화를 보며 파병 철회 혹은 연기를 발표한 나라도 발생하였다. 다시 말해 미국의 파병 요청 거절= 한미 동맹관계 악화= 국익 손상의 논리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파병반대세력으로부터 나왔다. 물론 동맹 강화론자들은 파병시 동맹의 이익보다는 파병 거부시 동맹관계 악화를 우려하였다. 이에 대해 파병반대세력은 파병 거부시 한미관계가 일시적으로 냉각되겠지만, 양국간 상호 필요에 의해 동맹관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거기에 파병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둘째, 파병반대세력은 이라크 파병으로 한반도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년센스이고, 오히려 파병이 부시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으로 그럴 경우 국제사회의 평화여론을 끌어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지점에서 파병반대세력과 노무현 정부의 입장이 현격하게 맞았다. 파병반대세력은 파병이 부시 정부의 핵선제공격 독트린을 추인하는 행위로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고 주장할 논리적 근거를 한국 스스로 파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파병은 곤경에 빠진 미국 내 강경파와 부시 정부를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미국 내 온건파와 세계 평화세력을 등지는 일이라고 비판한다. 평화운동가 정육식은 한반도가 국제사회로부터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전’이라는 가치를 보편화하는데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파병 반대가 한반도 평화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2003, 195-198). 파병반대세력은 앞에서 말한 성명에서 일차 파병으로 확인된 것은 이라크 파병과 한국의 안보문제 사이에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어 파병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완화하지 못했고 주한미군 재배치 결정 등에서 보듯이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은 한국의 파병과 무관하게 전개되고 있

16) 제238회 국회에서 김성호 의원의 발언, 제238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2003년 4월 2일, 19쪽.

다고 판단하였다. 실제 노무현 정부는 파병을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협조와 연계시키는 접근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파월(C. Powell) 국무장관으로부터 거부 반응을 초래하기도 했다(Sanger 2003). 그렇지만 노무현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을 진두지휘한 이종석은 “미국은 한국에 대해 불편한 소리를 했지만 6자회담 진전을 희망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점차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2014, 210)고 증언한다. 파병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이바지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파병반대세력의 입장은 달랐다. 부시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추진하며 대북 봉쇄를 강화하며 대북협상을 선호하던 노무현 정부에 PSI 참여를 요구하였다. 이런 사실은 파병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이 현실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파병지지세력의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임을 반증해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셋째, 파병반대세력은 파병이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파병지지세력의 기대는 허상이라고 말한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위 성명에서 부시 정부가 이라크문제에 관해 국제사회를 향해 ‘위험부담’의 분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석유와 정부 구성 등 핵심부분에 대해서는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라크전이 새로운 양상을 띠며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정부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이나 전후 안정화 및 재건사업으로 얻을 이익이 기약이 없다는 지적도 일어났다. 파병 반대측은 한미 간에도 파병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부가 1차 파병과 뒤이은 방미외교로 경제신인도 회복에 기여했다고 말하지만, 곧이어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한국경제가 피해가 입었음을 지적하며 파병이 경제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주장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한다. 나아가 파병반대세력은 이라크 파병이 베트남 파병과 달리 참전비용을 한국이 일체 부담해야 하고, 한국의 전후 재건사업 참여도 이라크 상황 악화로 불투명하고, 현대건설의 이라크 채

권도 이라크 전후 재건과정에서 탕감될 가능성이 있고, 파병 거부시 미국의 경제압박은 그것과 무관하게 진행되며 예상처럼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정책사업단 2003, 199-202).

넷째, 군사 이익 측면에서도 뚜렷한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파병반대세력의 입장이다. 사실 군을 보내는 국방부에서도 파병동의안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면서 한국의 군사 이익을 거론하지 않았다. 1차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조영길 국방장관은 파병 목적으로 세계 평화와 안정에의 기여, 한미 동맹관계 공고화, 경제적 고려 등을 꼽았다.¹⁷⁾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파병지지세력은 파병을 통한 군사적 이익이 적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방 당국이 그런 주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곤란했을 것이다. 그것을 공식 언급할 경우 이슬람권으로부터의 광범위한 반대 여론과 국내 파병반대 여론을 확대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파병지지세력이 기대하는 군사적 이익이 이슬람권에서의 한국의 부정적 이미지와 중장기적 국익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압도할 정도로 큰 것인지는 불확실했던 것이다. 이밖에도 파병은 이라크인들은 물론 이슬람인들에게 한국이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조했다는 종속적 이미지를 만들어 낼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중동 자원외교, 이슬람권 지역 관광 등 국가이익과 국민안전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있었다. 실제 김선일씨 피살사건으로 그런 우려는 현실화되었고 그것은 파병반대운동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파병 반대여론은 정부의 1차 파병동의안 처리를 지연시키며 농성을 이어가던 국회에서도 뜨거웠다. 2003년 4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국정연설에 이어 진행된 본회의에서 김근태(새천년민주당), 정범구, 김성호, 서

¹⁷⁾ 제237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2003년 3월 28일, 7쪽.

상섭, 김원웅 의원 등은 파병이 세계평화여론과 배치되고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것으로서 부메랑이 되어 한반도 평화를 해치고, 경제이익은 파병을 통해서가 아니라 한국경제의 불투명성, 불공정성을 개선해 투자 매력을 증진해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근태 의원은 파병이 2002년 월드컵 개최로 획득한 코리아 브랜드 가치라는 미래 가치를 손상시키고 동북아 중심 국가의 비전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무형의 국익, 장기 국익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주장했다.¹⁸⁾ 이런 주장은 추가파병동의안을 반대했던 박금자, 정범구 의원의 국회 발언에서도 재확인 되는데 “장기적 윤리외교”, “한미동맹보다 더 큰 한미우호관계”라는 표현이 그것이다.¹⁹⁾

요컨대, 파병반대세력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도 파병을 지지하는 측의 국익론이 허구이고, 파병은 경제적·군사적 실익이 거의 없고, 북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파병을 거부해도 한미관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파병 거부가 국익이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신 대중동 우호관계를 위해 이라크에 평화봉사활동을 제안하고 있다(김연철 2003, 189-198). 파병반대세력의 현실주의적 주장이 보인 특징은 첫째, 형식논리 측면에서 한미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상대적으로 중시하고 있는데 이는 파병지지세력의 논리와 유사하다. 둘째는 파병을 국익의 관점에서 파악할 경우 무형의 이익, 장기적 이익을 포함시켜 동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익론을 전개하고 있고, 셋째는 베트남 파병 사례와 비교하며 이라크 파병은 경제적, 군사적 이익이 과장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넷째는 국가이익을 보편가치와 연결지어 논리를 펴고 있다는 점이다.

5. 평가: 현실주의 대 현실주의

¹⁸⁾ 제238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2003년 4월 2일, 22-23쪽.

¹⁹⁾ 제245호 국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2004년 2월 13일, 8, 11쪽.

한국 평화운동에 대한 연구가 빈약한 것은 평화운동이 아직 초보 단계이기 때문이다. 평화운동의 발육부진은 분단체제에서 연유하는 정치·사회적 환경 때문이다. 그러나 평화를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로 정의할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물론 양심적 병역거부, 동북아 비핵지대화, 핵확산금지조약 체제 개혁, 군사문화 지양, 주한미군 범죄근절, 군에 대한 문민통제 등 한국 평화운동은 꾸준히 발전해왔다. 그 가운데서 한국평화운동이 본격화된 계기가 2003년부터 전개된 이라크전 중단, 파병 반대를 기치로 한 반전평화운동이었다.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격렬했고 정치사회, 시민사회를 막론하고 한국사회 전체를 균열시켰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는 아직 충분하지 않으며, 그런 가운데서 파병 찬반을 현실주의 대 이상주의라는 이분법적 도식으로 이해하려는 통념이 자리해왔다. 이 글은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논쟁이 현실주의 대 현실주의의 구도를 보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통념을 반증하고 있다. 한국의 이라크 파병 반대운동은 그 명분 못지않게 현실주의적 입장을 취했고 그것은 국익을 우선하며 파병을 지지한 다른 현실주의 입장과 대립 구도를 형성하였다. 이라크 파병반대운동은 ① 한국의 평화운동이 통일운동과 분리해 본격적인 출발을 보여준 일대 사건으로서, ② 그 범위가 시민사회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 전체로 확대되었고, ③ 세계 평화운동과 본격적으로 연대하였고, ④ 도덕적 호소에 그치지 않고 현실주의적 입장을 제시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사실 파병의 명분은 노무현 대통령도 인정할 정도로 적절하지 않았다. 파병을 둘러싼 논쟁은 파병이 국익에 유용한가 아닌가로 모아졌다. 본문에서 살펴본 파병 찬성 및 반대 세력의 각각 네 가지 논거는 모두 국익에 초점을 둔 현실주의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실제 국익을 중심에 둔 정부의 파병 결정에는 파병 찬반 주장에서 제시된 현실주의적 요소들이 중

합적으로 반영되었다. 정부의 파병 결정에는 비대칭적인 한미관계와 북핵 문제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지만 파병 규모와 성격, 시기 등을 감안할 때 이라크 상황, 국내외 평화여론 등과 같은 요소들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파병 찬반을 둘러싼 두 가지 현실주의적 입장도 정부의 파병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파병반대운동이 단순히 시민사회 일각의 도덕적 주장이 아니라 국가이익과 보편가치의 조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실적인 변수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실제 정부의 파병 결정과정을 추적해보면 국내외 상반된 여론을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파병반대세력의 현실주의는 이상주의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상주의적 파병반대론은 현실주의적 파병반대론의 범위를 규정해준다.²⁰⁾ 현실주의적 파병반대론에서 국가이익은 현실주의적 파병지지론의 그것과 달리 정의되고 해석됨을 이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향후에도 파병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결정에서 평화운동은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언론은 평화운동을 존중하고 그것을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 그리고 시민사회 내 토의민주주의를 활성화 하는 자양분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와 함께 평화운동이 개인, 국가, 세계를 아우르는 ‘보편적 이익’을 가져준다는 의식의 확산과 그 현실적 방안을 개발하는 노력은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반전평화운동에서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동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실험이다.

(2014년 3월 31일 접수, 5월 12일 심사완료, 5월 13일 게재확정)

²⁰⁾ 한 익명의 심사자의 지적이다.

참고문헌

1. 한글

- 강정구. 2004. “이라크 전쟁과 파병: 미국의 야만성과 한국의 자발적 노예주의.” 『경제와 사회』 . 63. 281-309.
- 「경향신문」 . “盧대통령 ‘국익 고려해 美지지’, 오늘 임시閣議 소집 파병동의안 의결.” 2003. 3. 21.
- 계운봉. 2012. “한국의 해외파병에 나타난 국가이익구조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구영록. 1995. 『한국의 국가이익: 외교정책의 현실과 이상』 . 서울: 법문사.
- 구우희. 2012. “해외파병과 국가이익: 한국군의 이라크파병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정홍보처. 2008.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5: 통일외교안보』 . 서울: 국정홍보처.
- 김관옥. 2005. “한국파병외교에 대한 양면게임 이론적 분석: 베트남파병과 이라크파병 사례비교” 『대한정치학회보』 . 13(1). 357-385.
- 김성한. 2004. “이라크 파병과 국가이익.” EAI 국가안보패널 연구보고서 2.
- 김엘리. 2003.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이라크 파병과 평화.” 『여성과평화』 . 3. 17-30.
- 김연철. 2003. “파병 거부가 국익이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정책사업단 편. 『이라크 파병 반대의 논리』 . 189-194.
- 김장흠. 2010. “한국군 해외파병 정책 결정에 관한 연구: 통합적 모형의 개발 및 적용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종대. 2010.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 . 서울: 나무와숲.
- 김현미. “이라크파병반대운동의 전개와 그 동학에 관한 연구-정치과정론적 관점에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무현. 2009. 『성공과 좌절』 . 서울: 학교재.
- 노엄 촘스키·하워드 진 외 지음·이수현 옮김. 2002. 『미국의 이라크 전쟁: 전쟁과 경제 제재의 참상』 . 서울: 북막스.

- 문재인. 2011. 『문재인의 운명』. 서울: 가교출판.
- 박병주. 2005. “정책논변모형의 적용을 통한 한국군 이라크 파병정책에 대한 해석.”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원희. 2006. “이라크파병 결정과 국가자율성.”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보혁. 2004. 『탈냉전기 북미관계사』. 선인: 서울.
- 우경립. 2010. “노무현 정부의 1차 및 2차 이라크 파병정책 결정 과정 분석- 앨리슨의 정책 결정 모델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경주. 2004. “이라크 파병과 헌법.” 『기억과 전망』. 8. 111-127.
- 이근욱. 2011. 『이라크 전쟁: 부시의 침공에서 오바마의 철군까지』. 파주: 한울아카데미.
-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정책사업단. 2003. 『이라크 파병 반대의 논리- 파병 반대 정책자료집1』. 서울.
-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정책사업단. 2005. 『이라크 파병 반대의 논리- 파병반대 정책자료집2』. 서울.
- 이종석. 2014. 『칼날 위의 평화』. 서울: 개마고원.
- 장올래. 2008. “탈냉전시기 해외파병 비교 연구: 한국과 일본의 이라크 파병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여진. 2005. “한국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NGO의 영향력 분석: 이라크 추가파병 사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육식. 2003.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전투병 파병.”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정책사업단 편. 『이라크 파병 반대의 논리- 파병반대 정책자료집1』. 서울. 195-198.
- 제237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2003년 3월 28일. 서울: 국회 사무처.
- 제238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2003년 4월 2일. 서울: 국회 사무처.
- 제243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2003년 9월 17일. 서울: 국회 사무처.
- 제245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2004년 2월 13일. 서울: 국회 사무처.
- 황인성. 2003. “이라크 파병반대운동을 통해 본 한국 반전평화운동.” 『시민과세계』. 4. 108-122.

2. 영문

- Ashford, Mary-Wynne and Guy Dauncey. 2006. *Enough Blood Shed: 101 Solutions to Violence, Terror and War*. Gabriola Island: New Society Publishers.
- Caldicott, Helen. 2002. *The New Nuclear Danger: George W. Bush's Military - Industrial Complex*. New York: The New Press.
- Carr, Edward H. 1956.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London: Macmillan Company.
- Chatfield, Charles and Robert Kleidman. 1992. *The American Peace Movement: Ideals and Activism*. New York: Twayne Publishers.
- Cortright, David. 2008. *Peace: A History of Movements and Idea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ltung, Johan. 1994. *Peace by Peaceful Means*. London: Sage.
- Johnson, Chalmers. 2004. *The Sorrow of Empire: Militarism, Secrecy, and the End of the Republic*. New York: Owl Books.
- Moorehead, Caroline. 1987. *Troublesome People: The Warriors of Pacifism*. Bethesda, MD: Adler & Adler.
- Morgenthau, Hans J. 1951. *In Defense of the National Interest: A Critical Examination of American Foreign Policy*. New York: Alfred A. Knof.
- Osgood, Robert E. 1953. *Ideals and Self-Interest in America's Foreign Rela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Murthy, B. Srinivasa (ed.). 1987. *Mahatma Gandhi and Leo Tolstoy: Letters*. Long Beach, California: Long Beach Publications.
- Peace III, Roger C. 1991. *A Just and Lasting Peace: The U.S. Peace Movement from the Cold War to Desert Storm*. Chicago: The Noble Press.
- Sanger, David E. "Intelligence Puzzle: North Korean Bombs." *New York Times*. October 14, 2003.

Abstract

An Experiment of Realist Peace Movement: Revisiting
Movement against South Korea's Troop Dispatch to Iraq

Bo-hyuk Suh

This study aims to refute a common idea that peace movement is an unrealistic orientation based on idealism through a case study. The author will investigate a series of prior studies related to this issue and establish an analysis framework in chapter 2. Then, in chapter 3~4, he will examine and compare the pros and cons of South Korea's troop dispatch to Iraq with realist perspective. At the last chapter, he will conclude the debate as an interesting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contending realisms and propose some implications for further study. Movement against South Korea's troop dispatch to Iraq, which is a genuine start of peace movement in South Korea, showed its realist prospect which is contrary to the popular belief.

Key words: Peace movement, national interest, realism, idealism, war in Iraq, movement against troop dispatch.